

# 與 “국익위한 대승적 결단” vs 野 “피해자 짓밟는 2차 가해”

‘제3자 변제안’ 與野 충돌  
與 “북핵 안보위기 앞에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절박”

野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  
삼권분립 정신 깨부수는 행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배상 촉구 의원 모임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제3자변제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역사관이 서로 충돌하며 후폭풍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강조하며 국익을 위한 관계 개선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부 발표 후 논평을 내고 “실타라가 뒤엉켜 있다고 놔둘 수만은 없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부안을 지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발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다. 또한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한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라며 “일본 정부의 성의 있고 전향적인 화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강제징용문제 해결을 위해 용기 있는 첫걸음을 뒀 수 있었던 것은 고려의 피해자분들에 대한 무

한책임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치열한 고민, 그리고 절실함이었다”며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핵 안보 위기 앞에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 일제의 잔혹한 역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발목 잡아서도, 또한 과거에 매몰된 채 강제동원 해법이 또 다른 전쟁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을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한일관계를 국내정치에 활용하면서 ‘토착왜구’, ‘죽창가’로 반일감정을 극대화시켜 끌어올렸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해 놓고, 대책 마련은 모른체 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정치적 부담도 느낄 수밖에 없고 엄중한 세계 정세 변화,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

조되는 시점, 미래세대의 양국간 교류 대한 기대 열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해법 모색 아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즉각 규탄 성명을 내며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거된 정부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 53명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국 한국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해국 일본의 책임은 완벽히 면제시키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을 즉각 파기 ▲일본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일본의 사죄로 수용한다는 굴욕적 결정을 철회 ▲일제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국기문란 행위, 삼권분립 훼손 행위,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배상안은 대한민국 헌법 최고 기관의 판결을 뒤흔들며,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정신을 일본을 위해 스스로 깨부수는 행위”라며 “더욱이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명시한 대법원의 판례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일본이 그토록 원했던 ‘합법적 식민지배’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의당 대표도 상무집행위원회 발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방식은 ‘강제징용은 불법성이 없고, 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는 꼴”이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압도적 투표율에, 김기현 vs 결선투표 ‘관심’

與 3·8전대 ‘최고 투표율’ 흥행  
김기현 “절대 다수가 김기현 지지”  
안철수 “대통령실 개입 의혹 답변을”  
천하람 “金,尹에 누 끼치는 민폐후보”

국민의힘 3·8전당대회가 ‘최고 투표율’로 흥행 동풍을 일으키고 있다. 2021년 이준석 전 대표를 선출한 전당대회가 기록한 역대 최고 투표율(45.35%)까지 뛰어 넘었다. 역대급 흥행에 따라 당 대표 경선 승자가 ‘대세론’을 형성한 김기현 후보일지, 막판 변수로 뒤집힐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누적 투표율이 53.13%(83만7236명 가운데 44만4833명 투표)로 집계된 사실을 공시했다. ARS 투표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해 7일 오후 6시에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투표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전당대회 최종 투표율은 지난 4~5일 모바일, 6~7일 ARS까지 합산해 8일 최종 발표한다.

당은 역대 최고 투표율에 고무적인 분위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84만 당원 선거인단이 정당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것”이라며 “압도적으로 높은 투표율에는 윤석열 정부를 튼튼히 뒷받침해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당 지도부를 만들겠다는 열망과 이번 전당대회를 단결, 화합, 전진의 장으로 만들라는 명령”이라고 평가했다.

당권 주자들은 투표율 고공행진에 자신에게 유리한 표심이라고 해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나경원 전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민의힘 동작을 나경원 당협위원장 사무실에서 열린 동작용을 당원간담회에서 손을 잡고 있다. /뉴시스

각종 여론조사상 ‘대세론’을 형성한 김기현 후보는 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표심의 흐름을 보면 절대다수가 김기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게 현장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높은 투표율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한편, ‘연포탕’(연대·포용·탕평) 행보도 이어갔다. 당 대표 예비경선 경쟁자였던 조경태·윤상현 의원에 이어 김 후보는 6일 오후 나경원 전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를 당원협의회의도 찾았다. 김장(김기현-장제원)을 시작으로 김나(김기현-나경원) 연대까지 막판 표심 물이 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땅 투기 의혹’,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 등이 전당대회 변수로 작용해 김 후보의 과반 득표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되는 데 대해 대응하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이와 관련 경쟁자인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

보는 김 후보의 땅 투기 의혹,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견제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그으면서도 “(대통령실이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적했다.

천하람 후보는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기현 후보를 겨냥해 “오죽하면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김 후보 그 자체가 대통령께 큰 누를 끼치는 민폐 후보”라며 비판했다. 황교안 후보도 같은 날 SNS에 김 후보를 겨냥해 “그동안 김 후보가 대통령이 자신을 만나며 대통령 팔이를 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여러 차례 경고했던 것”이라며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정의당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을”

“국민의힘, 수사하되 특검 불가 입장”  
더불어민주당과 논의 이어가기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거대 양당 원내대표를 만나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제(특검)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특검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의당은 민주당과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대장동 50억 클럽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씩 주기로 했다는 녹취록에서 비롯됐다.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과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가 화천대유에 6년 근무하고 퇴직금을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한 과 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되며 야권에서 특검에 대한 논의가 잇따랐다.

정의당은 지난달 20일 특검안을 발의하면서 특검 추천 과정에서 교섭단체 속하지 않은 정당을 배제하도록 해 거대양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배제했다. 두 정당 모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입장차를 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50억 클럽 관련해서 국민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시간을 드리기로 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다. 특검과 관련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면담 후 기자들에게 “과 전 의원의 건은 이미 기소돼 있어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검찰이 항소심에서 검사를 보장해서라도 유죄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밖에 (50억 클럽의) 이름이 떠도는 데에 대해서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수사 미진 이유로 지금 특검을 하자고 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남 후에 정의당과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특검안을 발의했으나, 추천과정에서 국민의힘을 제외하는 안이 핵심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대표성, 공식성을 감안한 형식적 절차를 갖추되 정의당이 국민 납득할 수 있는 추천방안을 제시한다면 민주당은 실질적인 추천 과정에 대해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